



탄핵 가결됐으니 이제 당장 내려와라 황교안 내각 등 적폐 청산 위해 계속 거리에 남아 있자

박근혜 탄핵과
퇴진 운동

2, 3, 4면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인터뷰

8면

트럼프와
미국 금리 인상, 더욱 불안
정해지는 세계경제

5면

2017년 예산은
내핍 강요 예산

6면

국정 교과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7면

켄 로치 신작
〈나, 다니엘 블레이크〉

2면

국회 탄핵 가결 이후

김기춘이 흰히 들여다본 헌재를 믿을 수 있나?

이제 박근혜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대중 투쟁에 떠밀려 국회가 탄핵소추한 인물의 거취가, 선출되지 않은 재판관 9명의 손에서 결정되게 생겼다.

헌재 재판관 9인은 대통령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1인, 여야 합의 1인)으로 구성된다. 2008년 이후 새누리당 정권 9년, 새누리당 과반 국회 8년이였다. 대법원장(임기 6년)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 재판관의 과반수가 박근혜 코드일 것임은 ‘안 봐도 비디오’인 것이다. 주류 언론들도 재판관 9명 중 6~8명을 보수 성향으로 분류한다.

헌재는 그동안 계급 차별적이고 노동계급 운동에 적대적인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에서만도 동성에 차별 균형법 합헌,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 통진당 해산, 물대포 직사 합헌 등을 결정했다.

헌재 소장 박한철은 2011년 당시 대통령 이명박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고, 박근혜가 헌재 소장으로 임명한 자다. 그는 대검찰청公安부장 시절인 2008년에 촛불 집회 참가자를 무려 1천2백여 명이나 기소했다. 미네르바 구속 수사도 지휘했다.公安검사 출신인 박한철이 김기춘·황교안과 이신전 심으로 통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의심이 일리가 있다. 이미 2014년 진보당 해산 판결 때 김기춘과 박한철이 사전에 교감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전 민정수석 김영환의 비망록이 폭로됐다. 균형법상 동성에 처벌 조항에는 두 번이나 합헌



지난해 5월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뒷받침한 헌재 판결 규탄하는 전교조 조합원들.

의견을 냈다.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 봉쇄에도, 삼성-안기부 X파일 사건 때 노회찬 의원의 유죄 판결 근거가 된 통신비밀보호법에도 합헌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는 대검公安부公安기획관 출신으로 2006년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인 일심회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위헌 판결이 난 간통죄에 합헌 의견을 냈다. 그는 박근혜가 임명한 조용호와 함께 진보당 해산 당시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보충 의견까지 냈다.

박근혜가 임명한 재판관 서기석은 “삼성 장학생”으로 불린다. 이번 박근혜

게이트에서는 뇌물죄 여부가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이재용의 후계 구도 완성을 위해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을 파헤치는 게 검찰 수사에서도 쟁점이였다. 그런데 서기석이 이런 것들을 엄중히 다룰지 매우 미심쩍다.

여야 합의 추천으로 임명된 강일원은 진보당 해산과 물대포 직사에 합헌 의견을 냈다.

재판관의 면면도 문제지만, 헌재가 탄핵심판을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는 법리 논쟁으로도 몰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탄핵심판이 특검 수사 완료 뒤로 미뤄져 박근혜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최악의 상황조차 배제할 수 없다.

퇴진 운동이 집권당 내부를 분열시켜 국회 내 탄핵을 가결시킨 위력을 헌재가 간단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위낙 반동적인 기구여서 결말을 안심해서도 안 된다.

통치 규칙

근본으로 보면, 헌법 자체가 지배자들이 약속한 국가 운영(통치) 규칙이다. 그래서 헌재는 기본적으로 체제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적 성향이 짙다.

헌재는 사실상 같은 사안을 정치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90년 민자당(새누리당의 전신)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자 야

당은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재에 냈다. 그런데 헌재는 시간을 질질 끌다가 1995년에야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1996년 말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법·안기부법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당시 민주노총 파업으로 공지에 물린 정권의 처지가 반영된 결정이었다.

그러나 정작 날치기 통과된 법안이 무효라는 헌재 판결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스스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한 1996년의 노동법·안기부법은 말할 것도 없고, 2008년 한미FTA 비준안, 2009년 미디어악법 등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법들이 지배계급의 안정적 통치에 필요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반면 헌재는 종합부동산세나 토지공개념 정책 같은 매우 온건한 개혁 정책들조차 위헌·헌법불합치 판결로 무력화시켰다. 부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일부 침해하는 것조차 용인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를 손 놓고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가 하루라도 더 청와대에 앉아 있는 것이 싫다. 탄핵심판까지 오게 된 것 자체가 결정적으로 지난 한 달 이상 지속된 박근혜 퇴진 시위 덕분이었다. 박근혜 즉각 퇴진을 위한 대중 투쟁이 계속돼야 하는 까닭이다.

이재현

본지 웹사이트에서 '죄죄죄한 헌재의 역사'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평 |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 켄 로치 감독)

고통과 빈곤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실패한 체제 탓

켄 로치의 새 영화는 영국 복지개혁의 현실에 대한 대담한 탐구다. 배우들의 강렬한 연기를 통해 디스토피아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오늘날의 현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 준다.

비록 영화 속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노동연금부(DWP)에 의해 삶이 좌지우지되는 많은 사람들의 실제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우리는 영화 속에서 주택난 때문에 런던을 떠나야만 했던 두 아이의 어머니, 복지 수당 청구자들에게 동정적인 고용센터 노동자, 숙련 목수이지만 일터에서 심장마비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뒤 더는 일할 수 없게 된 주인공 다니엘 블레이크를 만난다.

등장인물들은 친절함, 정직함, 진실성 등 인격적으로 많은 자질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런 것을 가지 없다고 여긴다. 실제로 등장인물들은 그런 덕목들 때문에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서 어려움을 겪고, 영화는 복지 체계가 실제로는 단 한가지 목적을 위해 설계됐다는 것을 갈수록 실감나게 드러낸다. 바로 복지 수급자들을 최대한 걸러내려 한다는 것 말이다.



주인공은 “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복지 수급자에서 제외돼 고통을 겪는다.

영화는 노동능력평가에서 “일할 수 있다”고 판정 받은 [즉,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복지 청구 자격을 잃는] 다니엘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겪는 시련과 고난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동능력평가로 복지 청구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는 신노동당 집권기에 도입됐으며 보수당-자유당 연정 기간에 더 강화됐다.

영화 속 장면들은 사실적이다. 최근 복지 수당을 신청해 본 경험이 있는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기시감을 느끼

게 된다. 노동연금부와 통화하기 위해 진이 빠지도록 기다려야 했던 경험, 구직 활동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복지 수당 청구 자격을 의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고용센터, 얼굴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수급권 결정권자가 휘두르는 무소불위 권력이 주는 공포.

켄 로치는 노동계급의 삶을 정확하고 담담하게 묘사하는 흔치 않은 재주를 가졌다. 그는 복지 “개혁”과 무료급식소, 정신건강, 세파에 부딪혀 여러모로 창조적이지만 또한 위험하고 굴욕

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 사이의 연관성을 들춰낸다.

켄 로치 감독의 작품답게, 영화는 고용센터 상담원들 사이의 충돌도 다룬다. 상담노동자들은 복지 수당 청구자들을 비난하는 우파 캠페인과,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본능 사이에서 갈등한다.

연금노동부의 통계를 보면, 노동능력평가에서 ‘일할 수 있다’고 판정 받아 고용지원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후 2년 내에 사망한 사람이 2천3백80명이나 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진행된 복지 “개혁”은 수많은 사람을 고통과 빈곤 속에서 살도록 만들었다. 언론과 정치인들은 그들의 불행은 개인의 책임이며 개인의 실패 탓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



실은 그들의 고통과 빈곤은 체제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런 불의를 볼 수 있도록 환하게 들춰내야 한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바로 그 구실을 수행한다.

프란체스카 매닝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6년 10월 호

번역: 최민혁

상영관 안내

수도권: 대한극장, 롯데시네마(건대입구, 신도림, 월드타워, 부평, 안양역, 주엽), 메가박스(센트럴, 신촌, 아트나인, 코엑스, 백석, 분당, 킨텍스), 서울극장, 씨네큐브 광화문, 아리랑 시네센터, 아트하우스모모, 에무시네마, 영화공간 주안

전국: 부산 롯데시네마(광복, 센텀시티, 오륙도), 메가박스 해운대/광주극장/대구 동성아트홀/창원 씨네아트 리즘

이렇게 생각한다

‘즉각 퇴진하라!’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탄핵됐다고 거리를 떠나면 안 돼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당함에 따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내 온건파들은 12월 10일 집회에서 “국민의 승리”를 일방으로 선언하고 헌법재판소(헌재) 심판 때까지 거리 항의 시위를 청산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자신은 6일 새누리당의 대표·원내대표인 이정현·정진석과 회담한 자리에서 현재의 탄핵 심판(심리와 재판)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투쟁할 것임을 암시했다.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 “탄핵이 가결되면 받아들이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당에서 이런 입장을 생각해서 협조해 주길 바란다.”

그 일주일 전인 11월 29일 박근혜는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음성 분석 전문가 조동욱 충북도립대 정보통신과학과 교수가 분석했는데, 그는 박근혜의 어조를 고스톱에 비유해 이렇게 말했다. “패 한 번 돌려야겠다는 상당한 의지가 실려 있다.”

상대가 싸우겠다는데 우리가 거리에서 물러나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박근혜 퇴진 운동은 크게 두 가지 전투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진보·좌파 진영이 주도하는 거리 항의 투쟁이고, 다른 하나는 주류 야당들이 주도(하고 사회민주주의 정의당이 지지)하는 제도권 책략이다.

둘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당면 목표를 공유하지만, 그 목표를 이룰 수단을 달리한다. 하나는 거리(그리고 노동자연대 등 좌파의 경우 작업장 파업도)이고, 다른 하나는 의회와 헌법재판소다.

두 수단은 ‘경쟁’과 ‘협력’의 역설적 관계인데, 일반적으로 “민중의 힘과 항의가 의회 책략보다 더 효과적”이다. 특히, 민중이 동원돼 민중의 힘이 가동되고 있는 “현재의 맥락에서[는] 대중 직접행동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민중의 힘이야말로 박근혜 퇴진과 퇴진 ‘이후’를 이어 줄 고리”다(《노동자 연대》신문 188호 사설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주의 혁명?

물론 지금 민중(시민)의 힘은 전혀 혁명적 수위에 육박하지 않았다. 국가 형태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군사독재나 파시즘 또는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국가인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혁명을 전망할 수도 있다. 1989년 동유럽에서 스탈린주의 국가 기구를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변혁한 민중 혁명이 민주주의 혁명의 사례였고, 또 2011년 튀니지와 이집트 등 아랍 세계를 뒤흔들었던 민중 혁명도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형태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이다. 비록 국가보안법



가장 큰 적폐인 박근혜가 청와대에 남아 있는 한, 거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존재하는 등 불완전한 요소가 엄존하지만 말이다.

국가 형태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인데도 민주주의 혁명을 일정에 올리는 것은 실천에서는 개혁주의로 나타난다. 비록 좌파적인 개혁주의일지라도 말이다. 좌파적인 개혁주의는 주류 개혁주의와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하나는 자본주의를 개혁해(‘인간다운’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규모 거리 투쟁 전술을(극도로 아끼지 않고) 기꺼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스탈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운운하기 전에 민주주의 혁명부터 완수해야 한다는 2단계혁명론을 고수해 왔다. 그리고 민주변혁 단계에서 그들의 실천은 좌파적 개혁주의 노선을 따랐다. 그래서 자민통계는 거의 모든 결정적 정국에서 참여연대의 좌파적 버전 비슷한 입장을 취해 왔다.

가령 자민통계는 2008년 6월 10일 1백만 촛불 시위 직후, 광우병 위험 미 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는 단일 쟁점 특권화를 폐기하고 이제 이명박 퇴진으로 나아가자고 한 좌파 측과 강경파 시위대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중심을 못 잡았다.”(정대연)

자민통계는 지금의 박근혜 퇴진 운동 안에서도 끊임없이 운동을 민주당과의 공조 속에 자리 잡게 하고자 참여연대의 왼쪽에서 그와 함께 애쓰고 있다. 특히, 퇴진행동이 민주당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4년부터 집권해 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민족회의(이하 ANC) 정부의 사례에서도 스탈린주의의 노선이 잘 드러난다. ANC의 핵심은 남아공공산당인데, 공산당은 심지어 ANC 정부의 신자유주의(특히 민영화) 정책을 지지해 왔다.

어떤 계급이 이끄는 ‘민중’ 혁명?

한국에서 혁명이 의제에 오른다면 그 동력은 계급을 초월한 민중 혁명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이끄는 민중 혁명, 즉 노동자 혁명일 것이다. 선진 산업국의 일원이 된 한국에서 민중의 대부분은 노동계급이다.

노동자가 아닌 다른 민중(노동계급에 속하지 않는 빈민 부분이나, 농촌의 중간계급인 농민)이 ‘혁명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손 쳐도 어디까지나 정치적 헤게모니(지도권)는 노동계급에 있을 수밖에 없다. 빈민이나 농민은 존재 조건상 자본주의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노동계급은 자체의 고유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철도 노동자들이 부분적 파업 행동을 했고,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이 유리한 정세를 이용해 파업이나 다른 형태의 쟁의 행위를 한 적이 있지만 전혀 일반적이지 못했다. 노동계급의 자체 활동이 없는데도 노동자 혁명에 대해 얘기할 수는 없다.

공장 점거 운동까지 수반된 1936년 프랑스 정국도 혁명적 상황으로 규정되진 않는다. 1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1968년 5월도 엄밀히 말해 혁명은 아니었다.

혁명적 상황이 아니라면

그 많은 적폐들은?

즉각 퇴진 시위대의 대부분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박근혜가 표상하는 온갖 적폐(쌓이고 쌓인 폐단)도 사라지길 원할 것이다. 그들은 단지 박근혜-최순실 부패 스캔들에만 부아가 치밀어 거리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최 부패 추문은 단지 운동이 분출한 계기일 뿐이다. 오직 온건하기 이를 데 없는 개혁주의자들만이 박-최 부패·비리 단죄로 만족할 것이다.

박근혜 탄핵과 함께 퇴진 운동이 적폐 일소를 위한 주류 야당 압박 위주의 전술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거리 투쟁을 정리 하길 원하는 자들의 구상과 일치한다.

박근혜의 존재(정치적 생존) 자체가 적폐의 일부분이다. 그것도 가장 큰 부분이다. 그러므로 그가 청와대에 남아

온갖 공작을 꾸미는데도 즉각 퇴진을 위한 거리 투쟁 없이 그저 개혁입법을 통한 적폐 일소에 힘쓰자는 심상정의원의 주장은 지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혁명적이거나 부분적으로 혁명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이행기’ 강령을 내놓을 수는 없다. 대중의 현재의 식과 전혀 조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선의 방법은 박근혜 즉각 퇴진과 그가 임명한 황교안 총리 내각의 총사퇴 등을 반드시 포함한, 현 시기에 걸맞은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 강령을 내놓고 주류 야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 강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친북 좌파와 혁명적 좌파도 정당을 결성할 정치적 자유, 온갖 노동계약 철회 등 몇 가지 핵심 요구들을 포함해 열 손가락을 넘지 않는 소박한 행동강령이어야 한다.

퇴진행동 측은 거리 항의의 청산주의자와 즉각 퇴진이라는 단일 쟁점 운동주의자 사이에서 분열되지 말고 박근혜와 황교안 내각 즉각 사퇴를 포함한 핵심 적폐의 일소를 위해 대중 행동 강령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계속 거리에서 싸워야 한다.

물론 좌파와 노동단체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요구를 위해 행동(특히 파업)을 하도록 고무하는 일도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파업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교회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와장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5만 원 이상 ()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탄핵안 가결은 민중의 투쟁이 낳은 성과

즉각 퇴진 투쟁은 계속돼야

김문성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2백 34표로 가결됐다. 국회 재적 대비 78퍼센트 찬성이고, 새누리당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탄핵소추에 찬성했다. 무기명 투표의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집권당도 거의 절반이 등을 돌려 박근혜의 대통령 직위가 정지됐다.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외쳐 온 민중의 투쟁에 국회가 압박당한 결과다.

지은 죄로 말하자면,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때 이미 두 번 세 번 탄핵됐어야 할 자다. 퇴진 운동은 여기서 멈추거나 조기 대선 준비로 휩쓸리기보다 고삐를 더 당겨야 한다.

지도자의 추락에 전전긍긍한 공범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주류 야당들도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바랐던 것은 아니다. 주류 야당들은 즉각 퇴진이 압도적이었던 거리의 운동과 처음에 거리를 뒀다. 박근혜 ‘2선 후퇴’, ‘거국 내각 구성’ 따위로 거래하려 하면서 말이다. 그 뒤 운동에 발을 걸치며 박근혜 퇴진 당론을 정하고 탄핵소추 추진을 선언해 놓고도 새누리당 일부와 밀실 거래를 하는 등 기회주의적 처신을 거듭했다.

이런 틈새를 노려 지난 주 박근혜는 검찰 수사도, 자진 사임도 거부한다는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근혜의 몸부림에 크게 한 방 먹인 것은 성난 민중이었다. 역대 최대 시위로 답했다. 주최 측 추산으로 전국 2백 30만 명, 최초로 청와대 담벼락 1백



“즉각 퇴진” “구속 수사” 박근혜에 대한 노동계급 대중의 증오가 상징하는 것은 정경유착 특권층 사회와 불평등 구조에 대한 반감이다.

미터 앞까지 진격한 서울에서는 1백 60만 명이 넘게 나왔다. 이날은 ‘단 하루도 쫓겨 보지 않겠다’는 분노가 더 두드러졌다. 여전히 뻔뻔하게 버티는 박근혜의 모습에 민중은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결국 강력한 거리 운동이 의회 정치인들로 하여금 자칫하다가는 자신들에게도 분노의 불길이 옮겨 붙을 수 있

다는 생각을 하게 했을 것이다.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성난 여론을 국회 탄핵으로 제도권 안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여전히 버티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그는 ‘현재 심판에 담담히 대비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해 온 국정과 제만큼은 마지막까지 추진해 [달라]

고 밝혔다. 그리고는 민정수석 최재경의 사표를 수리하고 세월호특조위를 내파하려 한 조대환을 그 자리에 임명했다. 아마 특검 수사와 현재 탄핵심판 심리 대비일 텐데, 이미 박근혜는 변호사들을 선임해 그 준비를 시작했다. 검찰과 현재 재판연구관 등 고위직 출신들로 알려져 있다. 총리 황교안도 2004년 고건 직무대행 당시의 자료를 검토하며



박근혜 내각 ‘원년 멤버’ 황교안이 자도 쫓아내야 한다.

탄핵소추 가결 상황에 대비해 왔다.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청와대 비서진은 총리실로 출근하며 박근혜에게는 비공식적 보고를 계속할 것 같다. 박근혜는 수렴청정을 하면서 막판 뒤집기를 획책할 것이다. 황교안은 복지 축소와 민주적 권리 침해 등 온갖 개악에 앞장서 온 박근혜 ‘내각 원년 멤버’다. 노동개악, 각종 민영화 등 악행에 앞장선 장관들도 자리를 그대로 지킨다.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고, 박근혜가 아직 대통령 권한에 앉아 있는 것은 박근혜 퇴진 운동을 통해 사람들이 바꾸길 바라는 많은 적폐들이 청산되지 않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압도적으로 가결하게끔 만든 그 힘, 박근혜 즉각 퇴진 대중 투쟁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4년 동안 누적된 반감과 저항이 박근혜를 코너로 몰다

여론조사는 변하는 사람들의 정서의 단면을 잘라 보는 것이고, 설문 문항의 구성에 따라 같은 시기에도 다른 답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간접적으로, 서로 다른 조사들의 비교를 거쳐 시간 변화에 따른 추이를 봐야 한다.

이 점에서 최근 폭발적인 반박근혜 여론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물론 박근혜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를 동시에 봐야 한다.

이렇게 보면 반박근혜 여론이 갑자기 최순실 등 몇몇 폭로로만 폭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박근혜가 당선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이 얻은 1천 5백만여 표는 비우파 후보가 얻은 최대치였다. 이는 인구 증가나 문재인 인기에만 의존할 수 없다. 과거 반성 없는 독재자의 딸이 구 세력과 함께 돌아오는 것에 반감을 표한 반박근혜 투표였던 것이다. 박근혜의 초기 내각 구성이 대중의 반발 덕에 한 달 이상이나 걸린 것을 떠올려 보자.

이후 상황은 <한글궐립>이 집권 1년 차부터 조사한 추이를 바탕으로 살펴 보자.(다른 조사들도 추이가 대강 비슷

하다.) 박근혜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대체로 낮을 때도 40퍼센트 수준에서 안정되게 유지돼 왔다. 그래서 콘크리트 지지율이란 말도 나왔다. 그러나 임기 첫해,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0%에 가까웠음도 봐야 한다. 즉, 경제 위기 고통정가를 위한 박근혜의 악행이 본격화하지 못해서 지지율이 유지된 것이다.

철도 민영화를 본격화하려다가 이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이 2013년 12월에 3주가량 진행되자 부정 평가도 30퍼센트를 넘기며 결집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부정 평가가 40퍼센트 후반에서 50퍼센트 중반대를 유지해 왔다.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하고 냉소적인 대응 때문에 2014년 3분기 이후 지금까지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측근 부패의 실상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격한 반대 여론 속에서도 관철된 2015년 상반기에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당시까지 가장 큰 격차로 앞섰다. 그 때는 바로 민주노총이 한상균 팀 하에서 노

동개악 반대 파업을 벌이며 저항을 재개한 때이기도 하다.

결국 온갖 반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경제 실패도 확인해지자, 올해 총선에서 박근혜는 참패했다. 그 뒤로 정권의 불안정은 본격화됐다. 노동개악 반대 공공·금융 파업이 시작된 가을에 마침내 지지율이 30퍼센트 밑으로 떨어졌다. 정권이 가장 취약해진 순간, 그토록 공포 싸매왔던 해괴망측한 부패상이 줄줄이 폭로됐다. 부정 평가도 늘었다.

분수령

결국 10월 29일 박근혜 퇴진 집회가 시작됐다. 참가 규모는 주최 측 예상보다 거의 열 배나 됐고, 사람들은 너나없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청와대를 향해 종로, 광화문을 행진했다. 이 시위는 일종의 분수령이었고, 퇴진 운동이 커지는 속도만큼 박근혜 지지율은 급속히 추락했다.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때, 사상 최대의 반박근혜 시위가 벌어진 뒤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지지율은 최저치로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최대치로 올랐다. 결국, 파죽지세로 성장한

퇴진 운동이 청와대 1백 미터 앞까지 이르자, 박근혜는 온갖 몸부림도 소용없이 대통령 직무를 정지당하는 탄핵소추 상태에 처하고 만 것이다.

이런 상황은 박근혜 퇴진 운동이 단지 몇몇 부패 추문 때문에 일어난 운동이 아님을 보여 준다.(물론 그런 추문은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박탈감을 한층 더 자극했다.) 운동 과정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폭락하고 주류 야당들과 그 당들의 대선주자들이 수혜자가 됐지만, 이 운동은 단지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만을 위한 운동이 아닌 것이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중심에는 시작부터 좌파와 조직 노동자들이 있었다. 여기에 대부분 미조직 노동자들로 보이는 30~40대들이 가족과 함께 대거 참가했고, 청소년들의 참가도 비교적 초기부터 두드러졌다.

즉, 거리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반박근혜 여론이 강력하게 조성되고 있었고, 노동자 투쟁이 이 여론을 이끌고 있었으며, 퇴진 운동의 사회적 구성도 노동계급 중심의 민중인 것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는데도 대기업과 특권층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사회, 평범한 민중보다 강대국 지배자들과의 협력을 더 중시하는 정부,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보다 대통령 개인의 심기 경호가 더 중시되는 정치 등에 대한 불만들이 결합한 것이다.

게다가 이 정부는 더러운 공작 정치를 일삼아 왔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방해와 모욕, 노동운동 와해 시도 등이 모두 정권의 공작과 관계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더러운 일들이 재벌과의 끈끈한 유착 속에서 이뤄졌음도 드러났다.

친특권층, 친기업, 반노동, 반민주, 반생명 정책들에 맞선 여러 투쟁과 경험 속에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반감은 총체적 증오로 성장했다. 물론 권력자들과 기업 성장을 위해 노동자·민중을 이용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박정희 신화’에 대한 거부도 연관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 박근혜와 그 체제는 아직은 죽지 않았다. 탄핵소추 가결 선포 후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는 국회의장 정세균의 말과 달리, 거리의 민중은 할 일이 남아 있다. 파죽지세로 성장한 이 운동이 여기서 멈출 이유는 없다.

‘트럼프노믹스’,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세계경제

이정구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퍼센트로 발표했는데, 이 수치는 연초에 비해 낮아진 것이다. 미국 대선으로 인한 정치 불안, 브렉시트의 여파, 선진국 경제의 장기 침체, 기업 부채 상승이 낳은 신흥 시장 불안을 그 이유로 꼽았다.

모리스 옅스펠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회복세가 더딘 데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정치적 긴장 등이 세계경제 전망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하자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이 형성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추세가 미칠 전 세계적 파장이 내년 경제를 좌우할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트럼프노믹스가 선거 공약대로 미국 경제 성장률을 현재의 2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끌어올리고 이것이 세계경제 회복을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을까?

트럼프노믹스

아베노믹스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노믹스도 신자유주의와 케인스주의의 조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트럼프는 당선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고 금융과 노동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해 기업주들에게 환대를 받았다. 또한 트럼프는 사회간접자본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때문에 로버트 스킨텔스키(케인스 전기(傳記)



트럼프에게 미국 경제 위기는 독이 든 성배가 될 것이다.

의 저자) 같은 케인스주의자는 트럼프노믹스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JP모건의 경제학자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이 매년 2천억 달러에 지나지 않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들의 추정에 따르면, 소득세 감면으로 2년 뒤인 2018년 말에 성장률이 0.4퍼센트 정도 높아질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예측은 소득세 감면으로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트럼프가 내세운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소문난 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는 사회간접자본에 4년 동안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그 투자금은 대부분 공공 지출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게서 조달할 계획이다. 트럼프가 소유한 부동산 기업이나 건설회사들은 큰 수익을 얻을 테지만, 민간 투자를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공공 지출로 되더라도 성장률은 고작 0.2퍼센트 오를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예측했다.

트럼프가 규제 완화, 세금 감면, 공공 지출 등으로 약속한 4퍼센트 성장을 달성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게다가 트럼프가 추진하려는 보호주의와 연준의 금리 인상 추세는 세계경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금리 인상

한편 2015년 12월에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한 미국 연준은 올 12월에 또 한번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에도 기준금리는 두어 차례 더 인상될 전망이다.

2009년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4.25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인하했고, 네 번의 양적

완화로 시중에 많은 자금을 공급했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미국 경제는 경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저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낮은 이윤율 때문에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중에 풀린 돈은 부동산 쪽으로 흘러갔다. 그 결과, 부동산 부문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제는 금융자본의 수익성을 회복해 주고, 자산 거품을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금리 인상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연준은행장 존 윌리엄스는 주택 거품을 잡으려 금리를 올리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 유동자본의 재편과 통화정책의 변경도 촉진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탈리

아의 불안정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은 내년 3월에 종료하기로 계획된 양적완화를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흥국들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다. 11월 한 달 동안 신흥국 주식펀드에서 73억 달러, 채권펀드에서 97억 달러가 빠져나가 순유출액은 20조 원에 이른다. 중국에서도 올해 수백조 원이 빠져나갔고 위안화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내년에도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신흥국에서는 자국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그로 인해 더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때문에 신흥국들은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압력을 받는다. 한국에서 금리 인상은 1천3백조 원 넘게 부채를 진 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그들에게 대출해 준 금융권을 부실하게 만들 것이다.

전 세계 차원에서든 가계·기업의 부채는 급속히 증가했다. IMF와 국제결제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 세계의 빚은 18경 원으로 세계 GDP의 2백25퍼센트에 이른다. 이 때문에 “돈의 향연이 끝나고 빚의 복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멕시코·터키·한국 등 신흥국 경제는 오랫동안 저성장을 거듭한 선진국 경제 때문에 내년에도 회복은 커녕 또 다른 불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의 보호주의, 미국 금리 인상, 브렉시트에 이은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신흥국 경제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의 부패로 촉발된 정치적 불안정성은 한국 경제를 더 심각한 위기로 내몰 수 있다.

고려대 학생들, 친기업적 대학 구조조정 계획 1차 저지

학교 측 반격과 꼼수에 대비해야

친기업적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인 “미래대학” 설립에 맞서 고려대 학생들이 1차 승리했다. 12월 6일 오후 학생들의 거센 항의로 “미래대학” 설립안을 통과시키려던 교무위원회가 무산됐다.

이날 학교 당국은 “미래대학”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 했다. “미래대학”은 한 대학 내에서 특권적인 ‘일류 학부’를 만들려는 시도이고, 기업의 이윤 논리에 대학 교육을 더 종속시킬 것으로, 박근혜의 교육 정책과 관련이 있다.(관련 기사: 188호, ‘학교 당국은 본관 농성 학생들 함박 말고 “미래대학”·학사제도 개악 전면 철회하라’)

지난 11월 28일 고려대 학생들은 학생총회를 성사시켜 “미래대학 설립 전면 철회”를 결정하고, 2주 넘게 본관 점거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학교 당국은 이런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교무위원회의 시간과 장소를 회의 직전까지 교수들에게도 공개하지



고려대 학생들이 학교와의 1차전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않은 채, 설립을 ‘몰래’ 강행하려 했던 것이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을 따돌리기 위해 실제 회의가 열리지도 않을 장소에서 회의를 할 것처럼 어설픈 연막을 치기도 했다. 또 교무위원회가 열리는 건물 앞에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하고 철창

까지 내려놓은 채 학생들을 가로막았다. 학교 당국은 이를 위해 사전에 직원 교육까지 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용감하게 저항했고, 이런 방해를 뚫고 교무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까지 들어갔다. 가장 많았을 때 2백여 명이나 모였다. 학생들

은 “교무위원회 취소하라”, “날치기 중단하라”, “미래대학 전면 철회”, “학교는 돈벌이 전당이 아니다”를 외치며 항의했다.

일부 교무위원들과 직원들은 교양 없이 학생들에게 ‘이놈’, ‘저놈’ 하면서 욕설과 반말을 하고, 샷대질을 하는가 하면, “징계” 운운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염재호 총장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내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연은정 학생(국어교육11)은 “염재호 총장이 친이명박 인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친박근혜 인사이기도 하다”는 점을 폭로하면서 “오늘 국회에서는 박근혜 탄핵이 가결됐는데, 미래대학도 날려 버려야 한다” 하고 주장했다.

염재호 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것으로 악명 높았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장

으로 일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철도·의료 민영화와, 공공요금 인상, 성과연봉제 추진 등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곳이다.

학생들이 수시간 동안 거세게 항의하자 학교 측은 더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해산해야만 했다. 학교 측은 ‘첫째, 오늘 교무위원회는 취소한다. 둘째, 미래대학에 대한 안건 논의 여부를 임시 처장회의에서 재논의하고, [교무위원회 논의시] 총학생회를 통해 사전 공지한다. 셋째, [오늘 학생들의 항의 행동과 관련해] 일절 징계하지 않는다’ 하고 약속했다. 학생들은 교수들이 회의장에서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며 환호했다.

학생들이 1라운드에서 학교 측을 저지했지만, 학교 당국은 꼼수를 부리며 반격할 기회를 노릴 것이다. 이를 경계하며 투쟁을 이어가서 “미래대학” 설립 시도를 완전히 주저앉혀야 한다.

이현주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강동훈

2017년 예산이 4백조 5천억 원으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최대한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보수 언론들도 예산이 처음으로 4백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고 경기 부양을 목표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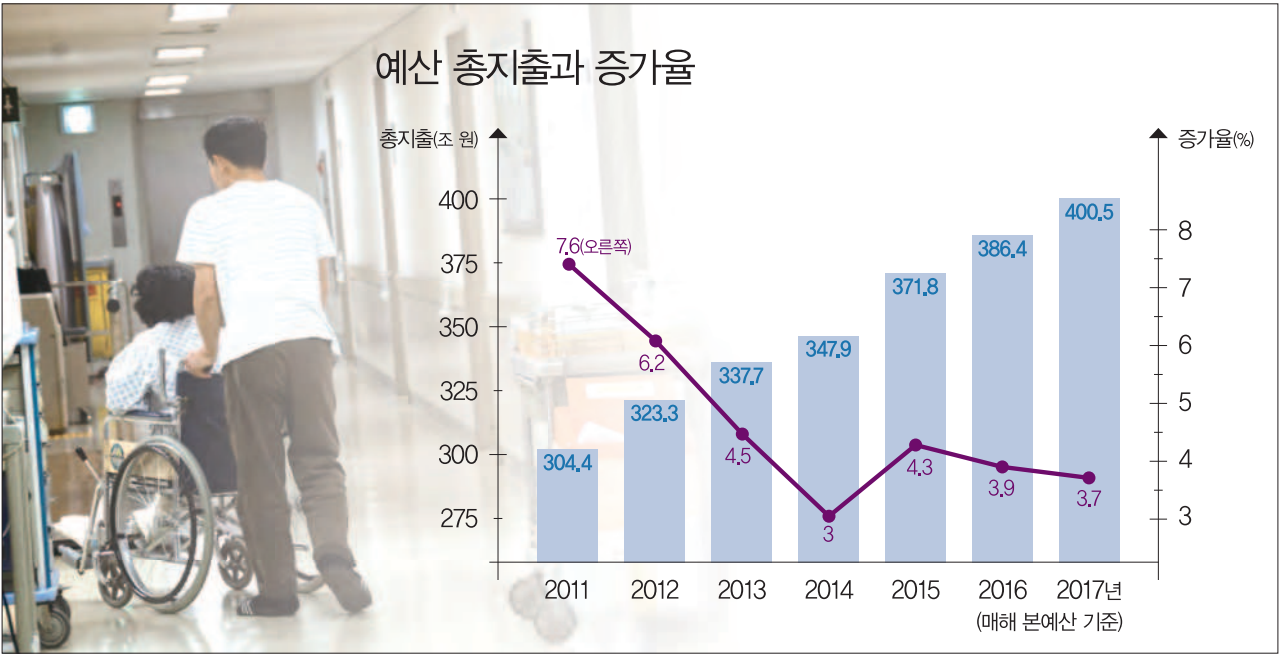
그러나 2017년 예산은 사실상 긴축 예산이다.

2017년 예산 총지출은 올해보다 3.7퍼센트(14조 1천억 원) 늘어났을 뿐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견주면 고작 2조 원밖에 늘지 않았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2011~15년의 4~5퍼센트보다 낮을 뿐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내년 경상성장을 예상치 4.1퍼센트(실질성장률 3퍼센트 + 물가상승률 1.1퍼센트)보다도 낮다.

게다가 내년 예산 총수입은 4백 14조 3천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올해보다 23조 원 늘어난 것이다. 즉, 예산 수입은 23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지출은 14조 원만 늘린 것이다.

이러다 보니 2017년 복지예산은 1백29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고작 4.9퍼센트(6조 1천억 원) 올라 증가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기초연금·국민연금 등에 대한 의무 지원금 증가분을 빼면 실제 증가액은 1천62억 원밖에 안 된다.

게다가 의무 지원금 중 건강보험 지원 예산은 2천2백11억 원을 삭감하기까지 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63퍼센



트밖에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지원해 보장성을 높이는 커녕 지원금을 삭감한 것이다. 건강보험 지원금이 삭감된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을 지원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퍼센트를 지원해야 하는데, 지난 5년간 법조차 어기면서 고작 15퍼센트 정도만 지원해 왔다. 그러다 기어이 2017년 예산에서는 지원금을 삭감했고, 국회에서도 삭감된 채 그대로 통과됐다.

이 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016년보다 26퍼센트(78억 원)나 줄었고,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방지하는 긴급복지지원 예산도 1백억 원이 줄었다.

반면, ‘나라사랑교육’,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예산처럼 박근혜가 중시하는 ‘안보교육’ 예산은 2백20억 원이나 책정됐다.

게다가 정부는 끝까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으나,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 예산 8천6백억 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나머지 1조 2천억 원은 시·도교육청이 마련해야 하는 데다 3년간 한시적으로만 지원하기로 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법인세

정부가 이처럼 보통 사람들에게 내핍을 강요하는 예산을 짰 것은 기업·부자 증세를 완강히 거부할 뿐 아니라 국가부채를 감축하려고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주류 야당들도 기업·부자 증세에 큰 열의가 없었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5백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을 기존 22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상하는 법안을 내놔지만 밀어붙이지 않았다. 여야는 대신 5억 원 초과 소득에 세율을 40퍼센트로 올리기로 했지만, 이조차도 애초에 민주당·국민의당이 내놓은 소득세 인상안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 소득세 인상으로 세금 6천억 원 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대표적인 ‘서민 증세’인 담뱃세 2천 원 인상으로 더 걷은 1조 8천억 원에 견줘도 얼마 안 되는 돈이다.

한편, 긴축적 예산 편성은 지배자들 내에서도 분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3퍼센트포인트 더 낮춰 2.4퍼센트로 예측했다. 정부가 내년 성장을 전망치를 3퍼센트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KDI는 경기를 부양하려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해 정부 지출을 10조 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예산안이 처리된 지 채 1주일도 안 돼 추경을 제안한 것이다.

한국은행과 IMF도 한국은 재정적 여력이 있으니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정부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한국은행을 압박해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다. 1천3백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더 늘고 부실해질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이탈해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거의 확실한 데다가, 트럼프가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로 국내외 금리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한국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5퍼센트까지 급등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은 구조조정이 한창인 해운·조선업과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2017년 예산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기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균형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내핍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부자 증세를 해 복지를 늘리는 것이다. 그래야만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

독자편지

ws@wspaper.org

12월 14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기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 더 큰 단결과 연대를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할 예정”

2004년 9월 당시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 탁학수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분신한 박일수 씨 투쟁에 합류하지 않으며 사측 입장을 편들었다는 이유로, 금속연맹(현 금속노조)이 현대중공업노조를 제명했다. 탁학수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를 제명한 지나친 처사였다. 그런 점에서 12월 20~22일 현대중공업노조가 진행하는 금속노조 가입 찬반 투표가 가결되기를 바란다.

현대중공업노조가 12월 20~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현 노조 집행부는 현수막을 엄청나게 많이 걸었다. “금속노조만이 살 길이다. 이제는 산별이다.” 이런 현수막이 없는 데가 없다. 그리고 방송차를 이용해 출퇴근과 점심 시간에 선동하고 있다. 또, 매일 지단별(부분) 파업을 하고 금속노조 가입을 위한 조합원 교육도 하고 있다. 현장에서 대의원들도 출근 시간에 집회를 하고 점심 홍보전을 해 금속노조 가입을 선동하고 있다.

우리는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면서 기업노조의 한계를 느꼈다. 회사는 우

리를 무시했다. 교섭장에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전과 같은 얘기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7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 15만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한다면 회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나는 무작정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대중공업노조가 우산이라면 금속노조는 파라솔이다. 파라솔이 좀 더 낫겠지만 나를 약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장점이 훨씬 클 것이다.

사실 조합원들의 금속노조가입 의사는 매우 컸다. 나는 대의원에 당선한 올해 초



11월 25일 현대중공업 파업 집회.

부터 “금속노조 가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제기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친사측 조직들은 금속노조 가입 추진을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우리 조합비를 금속노조에 바쳐서 노조의 재정 적자가 커질 것처럼 말한다. 올해 잦은 파업으로 조

합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다면 말이다.

이게 할 소리인가? 자신들이 집권했던 어용노조 12년간 견힌 조합비가 6백억 원 가까이 된다. 그런데 민주파 집행부로 이월된 돈은 얼마 안 된다. 12년간 파업 한번 하지 않았으면서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가? 친사측 조직들이 이 점을 전혀 말하지 않으면서 지금 노조가 파업을 많이 한다고 비난하는 건, 자신들이 ‘회사 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그들이 내는 유인물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어쩌다 누가 가져오면 찢어 버린다.

이번 금속노조 가입 투표는 잘될 것 같다. 투표자 대비 과반수 투표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일단 조합원 1만 5천여 명 가운데 생산직 8천5백여 명은 대부분 투표하고 찬성을 찍을 듯하다. 그럼에도 더 많은 조합원이 투표하고 찬성했으면 하는 바람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나는 이번 금속노조 가입으로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싸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얼마 전 종식 홍보전에서 이렇게 말했다.(점심 시간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의 3분의 2는 하청 노동자들이다.) “원하청 동지들, 올해에만 하청 노동자 1만 2천 명이 쥐도 새도 모르게 잘렸다. 금속노조에 정규직노조가 가입하면 하청노조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원하청 구분 없이 임금 협상을 같이하면 좋겠다.”

지금 우리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맞서 최선봉에서 싸우고 있다. 앞으로도 이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투쟁이 매년 노동자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 같다. 우리가 선봉에서 싸우겠다. 민주노총 동지들도 함께 투쟁하자.

김정구 현대중공업노조 대의원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국정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김동철

11월 28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이하 검토본)을 공개했다. 강한 반대 여론에도 내년 1월 최종본을 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토본은 2013년 사실상 0퍼센트의 채택률로 사장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이후 세금 수십억 원을 낭비하며 나온 또 하나의 '쓰레기'다. 엉터리 사실 관계와 베껴 쓰기뿐 아니라 내용 또한 교학사 교과서와 크게 다른 것이 없다. 이것은 '복면' 집필자들이 공개되면서 더 분명해졌다.

집필자 중 이주영·김명섭·나종남은 한국현대사학회 회원이다. 한국현대사학회는 교학사 교과서 주요 집필진 권희영과 이명희가 주요 회원으로 있고 뉴라이트의 선봉대 구실을 해 온 단체다.

건국대 교수 이주영은 4·3 제주항쟁 때 민간인을 도륙한 '서북청년회'를 '건국운동가'들이라고 추켜세우는 책을 썼다.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원장 김명섭은 이승만을 '반제반공 지도자'라 칭하며 '이승만 미화'에 앞장섰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나종남은 박정희 찬양론자이고 영산대 교수 정경희는 유신을 '정치개혁'으로 미화했다.

중앙대 교수 김승욱은 김인정 교과서가 '청소년들에게 반기업·반시장 정서를 확산시킨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옹호한 자다. 낙성대연구소 소장 김낙년은 식민지근대화론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다. 서울대 교수 최대권은 '세월호특별법'이 '헌법 원리에 반한다'며 세월호 운동 공격에 앞장선 자다.

이런 자들이 쓴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박근혜에게 즉각 퇴진이 답이듯 국정 역사교과서도 즉각 폐기가 답이다.

대한민국 수립과 이승만

1948년 '대한민국 수립'(건국)은 검토본의 중심 주장 중 하나다. 이 주장의 본질을 알기 위해 해방 후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

1948년 이승만의 대한민국 정부는 격렬한 계급투쟁을 거쳐 수립됐다. 이것이 지금의 이데올로기 투쟁(역사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해방 후 새 사회를 바라는 대중의 염원은 광범했다.(당시 조선인의 70퍼센트 이상이 바람직한 사회 체제로 사회주의를 지지했다.) 노동자들은 일제가 놔두고 간 공장을 스스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그동안 누적돼 온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특히 노동계급의 조직과 운동이 강력해서 농민과 천대받는 사람들을 이끌 능력이 있었다. 실제 1946년 9월 도시 노동자들의 투쟁이 10월 농촌으로 확산되는 항쟁을 이끌었다.

미군정과 그 후원을 받은 이승만·친일파들에게는 이런 조직과 운동을 분쇄하는 것이 사활적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탄압과 학살을 자행하며 친제국주의적이고 노동계급에 매우 적대적인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이승만 미화, 박정희 찬양, 노골적인 시장주의로 가득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근혜 적폐의 하나다.

이처럼 '대한민국 수립'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극도로 혐오하고 기업의 이윤 증대와 착취 강화를 위해 물불을 안 가리는 박근혜 정부와 현 지배계급에게 딱 맞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인정했으므로 '대한민국 수립' 주장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다. 이것은 상해임시정부를 자신들의 전통으로 삼는 민족주의 진영의 일부를 달래 보려는 시도기도 하고 이승만이 한성 정부(3·1운동의 영향으로 서울에 생겼고 후에 상해임시정부와 통합했다)에 참여했던 것을 근거로 이승만과 독립운동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승만은 조선의 혁명가 김산의 말을 빌리면 '설득력 있는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독립운동이라 생각했던 자로, 독립운동에 명함 내밀기도 힘든 인물이었다. 그에 비해 임시정부 인사들은 목숨을 내놓고 일제에 저항했다.(물론 주로 개인적인 저항으로 대중운동과 조직 건설에 보탬이 되지는 못했다.)

사실 1920년대 중반 이래 민족해방운동의 주도권은 공산주의자와 항일 무장투쟁 세력에게 있었다. 이들은 대중 운동과 조직을 건설하는 데 헌신했다. 그래서 한국 공산주의의 운동 연구자 서대숙은 당시 "한국인 전체에게 공산주의자들의 희생은 민족주의자들이 이따금 행한 폭탄 투척보다 훨씬 더 강한 호소력이 있었다"고 평했다.

따라서 뉴라이트의 논리를 비판하는 민족주의 진영이 임시정부를 독립운동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상정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박정희의 유산

국정 역사교과서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박정희 찬양이다. '박정희 위인전'이라 할 만큼 박정희 정부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설명이 많다. 노동자들의 가혹한 희생과 전태일 열사의 분신 등은 '고속 성장의 그늘'로 지나가듯 언급될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양의 문제가 아니다. 박정희의 '공과 과를 균형 있게 서술'한다고 해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경제개발(산업화)은 잘했지만 정치적 억압(민주주의)은 잘못했다는 주장은 박정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아니다.

이 시기 경제적 발전은 공공연히 자행된 독재와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에 기반한 것이다. 국가는 자금을 조달하고 공장 부지와 수출 경로를 마련해 주고 값싼 노동을 공급하고 일체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 시간 노동과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는 노동 강도 속에 '공순이, 공돌이'라는 천대까지 받으면서 일했다. 1976년 투쟁에 나선 해태제과 여공들이 노동부에 낸 탄원서에는 하루 12시간만 일하게 해 달라는 것과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 달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였다.

실로 이 시기 자본 축적 과정은 마르크스가 '자본의 시초 축적'기를 묘사한, "자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털구멍들로 피와 오물을 흘리며 태어난다"는 표현에 들어맞는다. 차이가 있다면 이 나라에서는 그 과정이 더 압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의 강력한 결합을 통한 자본 축적 과정에서 국가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지금의 재벌이 형성됐다. 최순실이 박근혜의 '오장육부'가 됐듯 부정부패는 남한 자본주의의 한몫이 됐다.

검토본의 또 다른 주장은 산업화로

임금이 상승해 중산층이 형성됐고 이것이 민주화의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 상승과 민주적 권리의 확립은 노동자 투쟁의 결과로 이뤄졌다.

박정희 정권의 자본 축적 과정에서 형성된 노동계급은 양적·질적으로 발전해 왔다. 엄혹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저항은 계속됐다. 특히 1979년 YH 노동자들의 투쟁은 부마항쟁과 박정희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도화선 구실을 했다.

전두환 정권의 폭압에 주춤하긴 했지만 노동자 투쟁은 계속됐고 1987년 6월항쟁에 뒤이은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6월항쟁으로 성취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운동과 조직의 질적 비약을 이뤘다.

요컨대 박근혜와 검토본이 이어받고자 하는 착취와 억압의 박정희 유산은 박정희 시대의 진정한 유산인 강력한 노동계급에 의해 도전받아 왔고 그들이 현재 박근혜 퇴진 운동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이다.

새로 나왔습니다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21 17호 2016년 12월 9,000원

마르크스21 17호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퇴진 운동
가부장제 이론 비판
불안정은 노동계급 전체가 겪는 문제다
마르크스 평가절하하기
트로츠키의 전환 강령: 그 활용과 오용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궤죄죄한 헌법재판소의 역사

★ '청와대 방송' 거부 KBS 파업
"청와대 개입, 이제는 정말 끝내자!"

★ 이명박근혜 집권기에 한국 무기 수출 11배 증가

★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건설 현장에서 죽어 가는 노동자들

★ 서울대 본부 점거 2달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위해 끈질기게 싸울 것"

★ 이화여대 이사회, 정유라 비리 감사 결과 발표
면죄부 주기, 꼬리 자르기 규탄한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인터뷰

“세월호 참사가 첫째 탄핵 사유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초반부터 박근혜 퇴진 운동에 앞장섰고, 그 운동을 상징하는 노란색 대열은 시간이 갈수록 늘었다. 집회 현장에서는 박근혜가 퇴진해야 하는 제일가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를 꼽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예은 아빠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박근혜 퇴진 운동과 세월호 운동의 관계 등을 말한다.

12월 3일 박근혜 정권 퇴진 시위대가 청와대 1백 미터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이 행진의 맨 앞에 세월호 유가족 수백 명이 있었는데 당시 심정이 어땠나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촛불 운동의 힘을 느꼈고 시민들과 함께 행진할 때 정말 기뻐했지만, 한편으론 청와대에 1백 미터 가까이 간 것만으로 이토록 감격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최순실 특검’도 ‘세월호 7시간’을 다루겠다고 밝혔는데요.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최순실 특검’은 세월호 참사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유가족들)가 원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수사하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특검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진실의 단서들을 최대한 밝혀내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으면 합니다.

유가족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단순히 박근혜가 그 7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7시간 동안 왜 해야 할 일을 안 했나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부터 말단 해경까지 어느 누구도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고, 구조된 선원이나 승객들에게 내부 상황을 묻지 않았 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구조를 못 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최근 폭로된 내용을 보면 박근혜는 7시간 동안 미용사를 두 번이나 불러 머리를 만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박근혜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

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다음에는, 정작 해야 할 일을 뒷전에 제쳐 둔 그 이유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의 7시간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박근혜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참사가 포함된 것을 비난합니다. 탄핵 사유에 세월호 참사가 꼭 포함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탄핵 사유에 명시된 것들은 모두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중에서도 세월호 참사는 특히 중대합니다. 수백 명의 생명을 직접 앗아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두말할 것 없이 탄핵 사유일 뿐만 아니라 처벌 사유입니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에 관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살인죄와 다름없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탄핵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말도 안 됩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 종료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특조위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였지만 사실상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특조위가 제구실을 못하고 강제 해산된 데에는 진실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가장 큼니다. 하지만 그에 맞설 수단이 없었다는 것 또한 결정적 문제였습니다. 사실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유가족들은 처음부터 주장했고, 여야 합의로 특별



11월 1일 박근혜 퇴진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예은 아빠 유경근 씨.

법이 통과되자마자 그것이 지닌 근본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2기 특조위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제한적 조사권 강화로는 안 됩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더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더민주당 등 야당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민주당은 “세월호를 얘기하면 선거에서 표가 안 된다”며 유가족들의 뜻을 끝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탄핵 사유나 특검의 과제에서 세월호 문제를 놓고 동일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촛불 운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첫째 탄핵 사유가 바로 세월호

참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줬습니다. 이번 거대한 촛불 운동 때문에 야당들이 엄청난 압박을 받았어요. 유가족들도 더 자신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김기춘의 세월호 인양 불가 지시가 폭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는데요. 현재 인양 상황은 어떤가요?

김기춘이 인양은 안 된다고 지시한 2014년 10월, 해수부는 수중 수색 지속을 원하던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수색을 중단하고 선체를 인양해 미수습자를 수습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아예 인양 시도조차 안 할 수는 없으니 시능만 하면서 사실은 희생자 가족들을 속였던 거죠.

해수부는 오늘도 인양 공법을 바꿨

습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정부는 제대로 된 검토도, 계획도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해수부가 인양 공법을 발표할 때마다 허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했지만 늘 묵살당했어요. 하지만 결국 유가족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현실이 됐고, 지금까지 인양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에는 인양이 될 거라고 하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믿고 싶으면서도, ‘이번에는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것일까’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운동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나요?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이 시작되면서 세월호 관련 언론 보도가 참사 초기에 맞먹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고양돼 있다는 게 정말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편적인 사실 관계들만으로는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어요.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인 진실을 밝히려는 ‘왜’를 물으면서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파헤쳐야 합니다. 앞으로 박근혜의 죄값을 묻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는 분명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김승주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사회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 차별과 천대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 일간 신문에 없는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전하는 신문
-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주)레프티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통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26개 호) 50,000원
☐ 2년 (52개 호)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010-6491-2792 / ws@wspaper.org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